

“이완규·함상훈 청문회 보이콧 검토... 헌법소원 추진”

민주,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비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진행할 것”
“李, 임명 저지 위한 모든 조치 당부”
“韓대행, 최악 벼슬아치·尹 꼭두각시”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는냐는 물음에는 “(검토할 수 있는) 후보 카드이긴 하지만, 아직 논의는 하고 있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사퇴를 앞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게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며 “(한 대행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삶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마나한 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내란 세

력이 현재 장악에 나섰다”라며 “본인이 대통령인가.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다”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규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임명권 없는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시작도 하기 전에 두 달 후 선출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셈”이라며 “그가 행사하는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파면에 의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이 이미 소멸됐다”고 비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훔친 도둑”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온 대통령 측근인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는 주장도 나왔

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라며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고 이는 내란 세력의 현재 장악 시도”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후임자를 무자격 임시직 권한대행이 새치기를 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왕통치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무자격자가 임명한 위헌, 무효인 재판관 지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소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헌법 파괴만 일삼는 한덕수 대행의 꼭두각시 죄를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부겸, 민주 대선 경선 불참... “정권교체 위해 전진”

박용진 등 비명계 연이어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사진) 전 국무총리가 9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에 위해,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자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대선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개정 등 제도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범진보 진영 통합 ‘완전 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 등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



지만, 오픈프라이머리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메시지는 사실상 불출마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전 총리 측의 한 인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활동 공간이 넓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른 비명계 주자로 꼽히던 박용진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비명계 주자 중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는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의결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국힘 “개정안 헌법 위반” 반발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운·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 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철회 “대선 후 논의”

“대선 주자들, 개헌 공약 제시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특히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튿날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단죄에 당력을 모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기록물 이관 본격화... 계엄 문건 공개 여부 주목

대통령실, 기록물 분류작업 마쳐 민주 “헌정 파괴 흔적·증거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9일 본격화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모두 28곳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관련 법에 따라 이관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기록물이

관 작업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권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기록물 분류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물에는 출력한 문서는 물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도 포함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 분류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으며,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인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은 헌정 파괴의 흔적과 증거를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철저한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